



한국의 금융개혁

윤계섭 (연구자문위원, 서울대 교수)

금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개혁위원회가 6월 2차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재정경제원이 법률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한 후 이것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효력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금융개혁안중 일부인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안 작성과정에서 이해당사기관간의 마찰로 말미암아 금융개혁 자체가 실패할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당초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이러한 개혁을 과연 추진해야 하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과 선정된 금융개혁위원회 위원 31명의 자격과 전문성 시비까지 겹쳐 출발이 신통하지 않았으나, 2차보고서를 제출한 현시점에서 보면 많은 주제에 걸쳐 엄청난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15명의 전문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4개월동안 50여회에 걸친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진행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이루어낸 결과였다. 비록 출발이 늦기는 하였으나 금융개혁중 이미 많은 주제가 각종 연구와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의 보고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이들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토의하여 결정하는 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 소고는 금융개혁위원회의 성과를 검토하고 최근의 마찰로 인한 개혁전망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개혁의 목표와 전략

금융개혁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에도 금융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은 계속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물론 국내제조업에 대

한 지원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 결과, 경쟁국가에 비해서 預貸마진이 높고 이용하기가 어려우며 각종 금융비용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고 투자수요가 왕성한 것에 큰 원인이 있지만, 2년내에 국내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한 후 외국금융기관과 안방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증권재벌그룹들의 부도사태와 한보사태 등은 이제 국내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개혁의 목표로서 「경쟁력 있고 편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진금융 지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단기과제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추진하기 위해서 금융개혁위원회는 우선 단기적으로 행할 수 있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금융산업 개편: 은행·증권·보험 등 산업별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직접 겸업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자회사 설립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진출을 확대한다. 또한 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벤처금융과 같은 여신전문기관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하여 규제를 철폐하고 등록제를 실시한다. 한편,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확충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조합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기관의 내부경영을 자율화하여 자산운용, 상품개발, 점포설치, 인사조직, 배당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금리 및 수수료 자유화: 금리자유화를 1998년내에 완성하고 수수료를 2000년까지 자유화하는 한편, 여신한도 관리제와 주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한다.

해외금융 규제완화: 해외증권발행, 해외차입, 외환대출, 해외직접투자 현지금융, 수출입관련 금융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벤처금융 활성화: 벤처금융사,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 투자조합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의 해외금융과 직접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시장기능을 높여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한다.

금융관행 개선: 여신금리 자유화와 預貸相計를 통해 꺾기관행을 해소하고 신용대출을 촉진하며 기업신용정보유통의 활성화와 기업채무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금융규제 완화: 금융산업내에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법령정비와 아울러 규제심판소를 설립 운영하고 행정지도 및 경영간섭을 금지하며 신고제를 정착시킨다.

통화관리체계 및 운용방식의 개선: 간접통화관리방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와 유사시 대응수단을 개발한다.

금융저축 증대: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금융세제를 보완하여 금융저축을 증대시킨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부실여신에 대한 공시와 부실채권 상각을 강화하며 채권추심전문회

사를 설립하는 한편 신규 부실자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신용정보 유통 활성화: 신용정보의 집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정보 이용을 확대하며 신용정보업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한다.

금융행정지원기능 효율화: 금융행정지원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며 금융전산망 확충을 통해 금융증개비용을 절감한다.

중·장기 과제

금융기관 설립 자유화: 금융기관의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촉진을 유도한다.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금융산업 구조조정: 건전성이 불안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고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파산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예금자 보호장치를 보완해서 금융기관 도산시 파급효과를 최소화한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정착: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물가안정 책임을 부여한다. 한국은행의 중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하에 금융감독원 및 통합예금보험기구를 설치하며 증권·선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금융시장 정보효율성 제고: 기업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고 기업공시제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자자금거래 관련제도를 정비한다.

정부관련 금융제도 정비: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업무 및 경영효율화를 꾀한다.

장기금융시장 활성화: 채권시장, 프로젝트 화이낸싱, 대출채권 유동화, 신탁제도, 연기금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자금흐름 정상화 유도: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금융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간 신용거래제도와 신용정보를 확충하고 금리 하향안정화 여건을 마련한다.

이밖에 우리 금융시장을 국제금융센터로 도약시키는 방안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금융체제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통해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맺는 말

금융개혁위원회에서는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줄속처리가 운위될 만큼 다양하고 많은 주제를 단기간내에 처리하였다. 그 중에서도 1989년과 1995년에 이어 논의된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제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해기관간에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금융개혁의 목표가 당초 이용자 편의를 중시하는 금융제도 구축에 있었다면 이용자가 아닌 정책 및 감독기관간의 대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하튼 2년내에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논의가 금융개혁 자체를 호도시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해당사자간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다른 과제의 중

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러한 논쟁의 항배에 따라 국회는 과거와 같이 금융개혁 자체를 다음 정권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으며 정권초기에 난제를 맡은 차기정권이 또다시 소모적 논쟁을 계속할 경우에 이미 때늦은 이번 금융개혁은 시기를 영원히 놓칠 것이다.

개인과 기관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금융개혁위원회의 案자체가 협상의 소산인 만큼 이해당사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단지 의견제시만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세계각국의 금융개혁안은 계속 발표되고, 또 각국의 금융도 크게 변모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경영학사(1968), 경영학 석사(1970)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1980)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1971~현재)
미국 New York대학교 교환교수(1981~82)
금융정책발전심의위원회 위원(1986~현재)
한국증권학회 회장(1992~93)

한국재무학회 회장(1993~94)
한국세무학회 회장(1994~95)
한국증권경제연구원 원장(1994~95)
한국금융학회 회장(1996~1997)
금융개혁위원회 위원(1997~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1993~현재)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후원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근거:
 - 법인회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4호
 - 개인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4호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 mail : IGENET@chollian.dacom.co.kr